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 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
문 2.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토지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고, 이들이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조한다.
- ② 무의사 결정이 좋은 예이다.
- ③ 지역의 문제를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나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이다.
- ④ 공공선택이론과 연계되기도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②, ③, ④(기존 정답: ④)

- ②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항: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(18세 이상의 주민)
 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 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 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
 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
 5.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
 6. 인구 5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
-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(2022. 1. 13.)제정되어,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.

2. ③

- ① 성장기구에 대한 설명이다.
- ②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.
- ④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공공선택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.

문 3.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갈등조정기구이다.
- ②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,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-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·결정한다.
- ④ 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
문 4. 「주민투표법」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?

-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- ②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
- ④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(단,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3. ②

-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: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: 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4. ③

-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: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 즉 2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.

문 5. 아른스타인(Arnstein)의 주민참여 8단계 중 <보기>의 A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해당되는 단계는?

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.

- ① 권한위임단계(delegated power)
- ② 주민통제단계(citizen control)
- ③ 동반자단계(partnership)
- ④ 유화단계(placation)

문 6.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.
-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.
-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.

문 7. 지방분권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→ 자치분권위원회
- ② 자치분권위원회 →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
- ③ 자치분권위원회 →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
- ④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→ 자치분권위원회

문 8. 「지방자치법」상 시·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
- ②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·조정 등의 사무
- ③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등 광역적 규모의 사무
-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·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정답 및 해설

5. ③

- ① 권한위임: 동반자 관계를 넘어 주민이 오히려 결정권을 주도
- ② 주민통제 또는 자주관리: 주민이 모든 결정을 주도
- ③ 동반자관계: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(결정권을 공유)
- ④ 회유 또는 유화: 제대로 된 참여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단계

6. ①(기존 정답 : ②)

-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※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22. 1. 13.)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변경되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①

· 분권 추진위원회 연혁:

지방이양추진위원회(김대중 정부) →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(노무현 정부)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+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(박근혜 정부) → 자치분권위원회(문재인 정부)

8. ③

· 지방자치법 제15조(국가사무의 처리제한) 제3호: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
문 9.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뜻하는 것은?

- ① 가예산
- ② 잠정예산
- ③ 추가경정예산
- ④ 수정예산

문 10.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행정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한다.

문 11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반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.
- ②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의 중층제이다.
- ③ 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더 많은 계층 수가 존재하고 있다.
- ④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다.

문 12.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사무감사의 현지확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의해 당일 통보하여 행사할 수 있다.
- ②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.
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 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④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0. ①

-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: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③

- 행정계층의 수가 자치계층의 수보다 더 많다.

12. ④

-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: 현지확인인 통보 등은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: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: 감사나 조사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, 하부행정기관,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, 지방공기업 등이다.
- ④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

문 13. <보기>는 「지방자치법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 ㉠, 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?

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(㉠)을 거쳐 (㉡)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
㉠

① 지방의회의 의결

㉡

행정안전부장관

② 지방의회의 의결

시·도지사

③ 시·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

시·도지사

④ 시·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

행정안전부장관

문 14. 쿨리 독트린(Cooley doctrine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.
- ②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(州)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.
- ③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.
- ④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.

문 15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상황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.
- ③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문 16.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알려준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산액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백분비로 나타낸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: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
14. ②

· ① 쿨리 독트린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.
· ③ 쿨리 독트린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.
· ④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딜론의 견해가 딜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었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③

·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: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16. ①

· ②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절대적인 재정 규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.
· ③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으로 계산되므로, 세출정보를 알기 어렵다.
· ④ 재정자립도 = 자주재원(지방세+세외수입) / 일반회계 총세입

문 17. <보기>의 정부 간 관계(IGR)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라이트(Wright)의 중첩권위모형은 연방·주·지방 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.
 ㄴ. 로즈(Rhodes)는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‘자원의 교환 과정’으로 인식한다.
 ㄷ. 윌슨과 게임(Wilson & Game)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·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ㄱ, ㄴ, ㄷ

문 18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에 속하는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결산의 승인
 ㄴ. 기금의 설치·운용
 ㄷ. 재의 요구
 ㄹ. 예산 편성
 ㅁ. 청원의 수리·처리

- ① ㄱ, ㄴ
 ② ㄱ, ㄴ, ㅁ
 ③ ㄴ, ㄷ, ㄹ
 ④ ㄱ, ㄴ, ㄹ, ㅁ

문 19. 「지방자치법」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지도·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·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.
 ③ 시·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·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.
 ④ 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·도지사가 취소·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문 2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,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.
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①

- ② 지방자치법 제184조 제1항: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· ③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2항: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·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· ④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: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20. ④

-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: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시·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④

- 정부 간 관계(IGR) 모형은 내포형, 중첩형, 분리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.

18. ②

- ㄷ, ㄹ.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42조: 재의 요구와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.